

■ 사립초의 73%가 입학지원서에 출신(영어)유치원 기재를 요구하는 실태 비판보도(2016. 10. 04.)

# 입학 지원서에 출신 (영어) 유치원 기재를 요구하는 사립초가 73%나 되어도 이를 막을 법이 없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문위)의 보도자료(2016.9)에 따르면, 전국 사립초등학교 (이하 사립초) 75곳 중 55곳이 출신 유치원을, 23곳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속칭 영어 유치원) 등 '출신 어학원'을 입학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함.
- ▲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까지 내려온 실태가 확인됨.
- ▲ 추첨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입학지원서에 출신유치원을 포함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원 발생 시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며, 이러한 입학지원서는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됨.
- ▲ 9월에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출신학교를 기입하지 못하도록 해, 초등학교 입학단계에까지 내려간 출신학교 차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함.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문위)은 지난달 9월, 전국 75개 사립초의 2016학년도 '입학지원서'를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사립초가 출신유치원, 출신학원(어학원), 부모님 직업, 부모님 종교, 해외 체류경험 등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75개의 사립초 중 55군데(73%)가 출신유치원을 기재하게 하고 23군데 (31%)가 출신학원(어학원, 속칭 영어유치원)을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표1] 사립초 입학지원서 기재요구 항목 현황

구분	사립초 수	부모님 직업	출신 유치원	출신학원 (어학원)	부모님 종교
서울	39	10	30	13	3
경기	3	1	2	0	1
인천	5	3	4	4	3
강원	3	2	2	1	3
경남	2	1	1	0	0
경북	3	3	3	0	0
광주	3	0	3	1	0
대구	4	1	2	1	1
전남	3	1	0	0	0
충북	1	1	1	1	0
충남	1	0	1	0	0
대전	2	0	2	0	0
부산	6	2	4	2	2
		25	55	23	13
합계	75	33%	73%	31%	17%

출처: 박경미 의원실 보도자료, 사립초 입학원서에 "영어 유치원 경력", "학부모 직업" 등 요구, 2016.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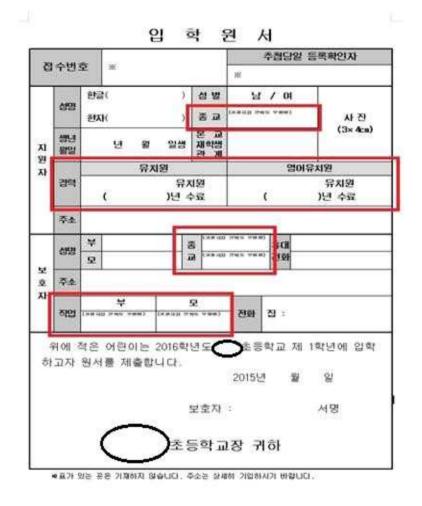
■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채용뿐만 아니라 대학원 이하의 모든 교육기관을 거쳐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조차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됨.

사립초의 이러한 입학지원서는 채용시장에서 지원자들의 직무능력 대신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관행, 서울의 모 로스쿨(법학전문대학) 입시에서 응시생들의 출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차등점수를 매겼던 사례, 대학들에서 나타나는 특목고 우대 등의 출신학교 차별 등의 양상이 사립초까지 영향을 미쳐 출신 유치원이나 출신 어학원이 식별과 차별, 선발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추첨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입학지원서에 출신유치원이나 출신학원(어학원)을 포함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원 발생 시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게 하며, 이러한 입학지 원서는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

사립초 입학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초가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출신유치원, 출신학원(어학원), 부모님 직업, 부모님 종교, 해외 체류경험 등의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추첨식 학생 선발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박경미 의원 보도자료에 실린 2016학년도 사립초 입학지원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림1] 서울 00초등학교 입학지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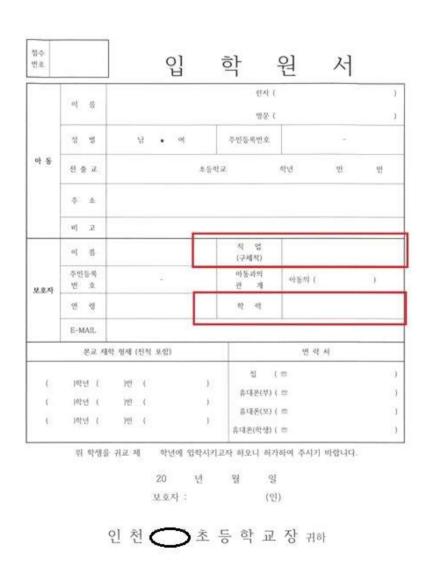
출처: 박경미 의원실 보도자료, 사립초 입학원서에 "영어 유치원 경력", "학부모 직업" 등 요구, 2016.9.23.

추첨과 전혀 상관없는 입학지원서 자체에 출신유치원의 이름과 수료 연수를 적게 하고, 심지어 사교육 기관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영어유치원이라는 불법 용어까지 사용해서 경력으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학생에게조차 어떤 유치원을 나왔느냐, 얼마나 다녔느냐를 물음으로 출신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에 따른 선별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그것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과정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해도 이러한 암시와 신호는 기재하는 지원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입학 이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과 등록 이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학지원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박경미 의원의 지적대로 "특히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은 정규 유아교육과 정에 없는데도,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은 내역을 입학지원서에 적으라 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라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라며 영어 과잉 교육, 사교육 유발 행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 입학지원서에는 이외에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부모의 종교, 해외 체류경험까지 적도록 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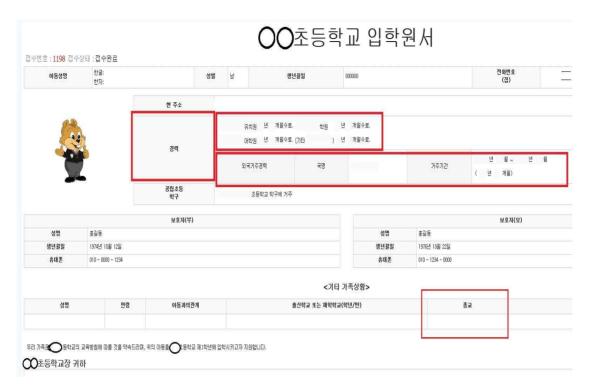
또한 입학지원서에는 부모의 학력, 직업, 종교, 해외 체류경험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해외 체류경험까지 적도록 하는 것은 지원자의 단순 신상을 넘어 그 배경을 통해 학생들을 식별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기에 입학지원서에서부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금수저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2] 인천 00초등학교 입학지원서



출처: 박경미 의원실 보도자료, 사립초 입학원서에 "영어 유치원 경력", "학부모 직업" 등 요구, 2016.9.23.

#### [그림3] 부산 00초등학교 온라인 입학지원서



출처: 박경미 의원실 보도자료, 사립초 입학원서에 "영어 유치원 경력", "학부모 직업" 등 요구, 2016.9.23.

■ 교육부에서는 학습환경 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와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 등 모든 학교 초·중·고등학교 사용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 정보'란을 전면 없애 위화감과 차별을 없애기로 하였으나, 사립초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사립초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입사지원서에 반해 교육부는 모든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 2016년 6월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변경 전의 학습환경 조사서가 부모와 다른 가족의 나이, 학력, 직업, 직장, 직위(직책) 나 경제적 형편을 적도록 하였다면 변경 후에는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 조사서를 선택하여 학생의 관심, 특기 등의 실태, 학습지도나 생활습관 등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림4]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 조사서(사례1)

자물 기재 발식의 황숙환경 조사서 (사례)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일					
		(한자)		E-mail 함성 전화번호					
보호자	구분	성명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저					
	푸								
	모								
우리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		성명		학년/반					
	(학생	출선생님에게 생 지도에 도움이 될것	에 알리고 싶 으로 만단되		적어주세요)				
합성 실태	* 관심분야 :								
	* 자랑거리(독기) :								
	•취미:	취미:							
	*학생 버릇 또는 성격 :								
				분 등 선생	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학습지	도 생활습	생활습관/건강지도		기타 중요사항				
		• 학교에 바라는 경	연도욕 자유로	게 점이죠.	MQ a				
		= 세포에 이디는 2	⊅ क.च. ~ ति <b>व</b>	न्य नगर	44 <b>*</b>				

출처: 머니투데이, 학부모 신상정보란, 초·중·고 서식에서 사라진다, 2016.5.30.

초등학교 입학 후의 학습환경 조사서나 초등 돌봄교실 입반 원서 등에서조차 학생들의 배경이 편견과 차별로 작동할 것을 우려해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립초가 입학도 하기 전의 지원자에게 이렇게 과도한 학생과 부모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초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은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출신학교 기입을 막아야 함.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립초 입학원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박경미 의원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출신학교 기입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올해 9월에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8인 발의)에는 교육기관에서의 다음과 같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교육기회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을 제한·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 2.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입학전형절차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3.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입학전형자료에서부터 출신학교에 따른 선별과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인 만큼 이번 사립초의 출신유치원이나 출신학원 등에 대한 기재를 원천적으로 막고, 배경이나 출신학교가 교육기회에서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을 뿌리 뽑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 우리의 요구

- 1. 교육부는 사립초 입학지원서의 불필요한 정보 요구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출신유치원, 출신학원(어학원), 부모님 직업, 부모님 종교, 해외 체류경험 등의 기입 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2. 교육부는 이미 진행된 사립초의 이러한 실태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입학전형자료에서 출신학교나 출신유치원 등으로 식별 혹은 차별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과도한 교육열을 부추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6. 10.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70-7602-2768/내선번호 510)